

在野統一案 研究

1991. 12.

金 道 泰(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要 約

I. 서론

본 연구는 非制度圈의 在野統一論議를 분석하여 그 특징과 논리의 適實性을 이해하고 國論統一의 바탕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問題를 제기한다. 첫째, 재야의 각 통일방안들은 어떠한 特徵을 보이며,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둘째, 政府統一案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등이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문익환·백기완·김낙중 諸氏의 통일안과 학생운동권에서의 양대 계파인 自民鬪(NL)와 民民鬪(PD)계열의 통일방안,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통일방안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統一理念, 統一過程, 統一이후의 狀態에 관한 위의 논의의 비교·분석과 재야통일안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의 收斂可能性 여부와 그 限界를 분석한다.

II. 在野統一案에 대한 歷史的 接近

이념대립에 의한 冷戰狀態를 경험해 온 한국의 실정에서 民間에서의 통일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1972년 維新體制 이전까지 民間의 통일논의는 저조하였으며, 10월유신 이후 反政府運動의 일환으로 在野人士들 사이에서

「민중의 주체성」과 「민주화와 통일의 불가분성」 등이 주장되면서 이것이 재야통일운동의 論理 및 方向提示의 바탕이 되었다.

1980년대 초에 이르러 시작된 「한국사회구성체 논쟁」으로 본격적인 統一論議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통일방안이라 할 만한 提案도 등장하였다. 문익환의 「3단계 연방제통일론」, 백기완의 「반외세민중통일론」, 김낙중의 「3차 7개년 계획에 의한 평화통일방안」이 등장하였고, 학생들 사이에도 NL계열과 PD계열이 중심이 되어 활발히 統一論理를 전개하였다. 종교계의 統一論議도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나타나게 되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의 통일논의가 발표된 바 있다.

Ⅲ. 在野統一案 分析

1. 理念分析

통일개념, 통일주체, 통일원칙을 중심으로 재야통일논의의 이념을 분석할 때, 우선 각 재야통일논의에서 제시된 통일의 개념을 보면, 대체로 재야에서는 통일을 남북한간의 단순한 空間的 結合으로 이해한다. 또한 이들은 南北間 結合이 分斷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분단의 원인을 현한국사회의 성격에서 찾고 있다. 즉 재야인사들은 外勢의 植民地性과 현정부의 파쇼·독재성향을 통일저해요인으로 이해하여 이의 극복을 통한 민중해방과 민주주의 달성을 통일

과정의 前半部로 보며, 남북의 공간적 통합을 통일의 後半部로 인식한다. 학생운동권 중 NL계열은 分斷과 분단상태의 지속이 미국과 일본의 帝國主義로부터 기인한다고 파악하기 때문에 南韓의 自主化 달성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반면에 PD계열은 이미 노동자 혁명이 성취된 北韓과 統一을 이루기 위하여 남한에서 노동자들이 革命으로 프롤레타리아정권을 수립하고 階級矛盾을 해결하여야 통일이 가능해진다고 파악한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민족의 再結合으로 人間의 존엄성을 되찾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人道主義 統一을 강조하고 있다.

統一主體에 관해서는 김낙중을 제외하고 모두 民衆을 主體로 여기나, 통일의 개념에 따라 각 계파마다 민중의 개념이 조금씩 상이하다. 문익환과 백기완 등은 민중을 다수의 정치적·경제적 소외계층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학생운동권의 NL계열은 남한내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變革 意志를 갖는 지식인과 小資本家階級이 統一의 전반부인 民主化過程에서 주체가 되고, 후반부 통일과정에서 外勢와의 투쟁주체는 남북한 민중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D계열에서의 민중은 노동자만을 의미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의 민중은 통일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의 참여가 인간의 尊嚴性과 自由保障의 첫 단계임을 강조한다.

統一原則에 있어서는 재야의 모든 세력은 공히 7.4공동성

명에서 남북한간 합의된 통일원칙인 「자주·평화통일·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그대로 수용·지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 3원칙 외에 人道主義와 民衆主體의 원칙을 추가한 5대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2. 過程分析

재야통일논의에서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先決課題로 통일환경 조성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 內容은 南韓의 民主化와 自主性 확보방안으로 요약된다. 공통적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내용으로는 남한사회의 경제적 예측화, 사회적 불평등, 서구가 치 지향적 문화 등으로부터의 탈피와 주한미군 철수, 핵기지 철폐, 남북평화협정 체결 등을 들 수 있다.

統合形態와 관련, 재야인사들은 段階別 統合方式을 채택하고 있으며, 聯邦制를 과도형태로 규정하고 單一民族國家를 궁극적 통일형태로 본다. 학생운동권의 통일방안에서도 이러한 단계성과 권력분산형태의 聯邦制(國家聯合制 포함)가 통합의 형태로 고려되고 있으나, 다만 이들에게는 통일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남한내의 變革過程이 통합절차에 함께 포함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통일방안도 구체적인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과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남북한체제의 대등성을 인정하고 점진적인 통합외에 代案이 따로 없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統合過程의 組織 및 制度에 관해서는 재야인사들 중 김낙중만이 비교적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고, 문익환·백기완의 통일논의에서는 통일과정을 수행할 제도나 기구의 언급이 거의 없다. 학생운동권에서도 통일과정 수행을 위한 제도와 기구를 소홀히 여기고 있으며, 이들이 제안하고 있는 소수의 조직이나 기구들은 지속성있고 책임있는 정치기구가 아닌 一過性의 宣傳的 組織에 불과하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의 통일방안에서는 國際機構(세계교회협의회, 국제적십자사, 유엔, 비동맹국가 등)의 활용과 한국교회가 주도하는 國際會議의 개최를 통한 통합추진 방안이 통일과정의 조직과 제도를 대신하여 제시되고 있다. 결국 김낙중을 제외한 재야통일논의자들은 남북한의 통합과정을 위한 조직 및 제도에 관해서는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性向은 남한내의 민주화를 통한 통일환경 조성이 통일의 關鍵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재야의 통일방안에서 논의되는 남북한간 接近方法에서는 機能的 交流·接近의 유용성도 긍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한간 동질성 회복이라는 交流의 獨立的 機能性이 강조되지 못하고 政治的 接近을 목적으로 비정치적 교류가 手段化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통일안에서 보이는 교류 및 접근 제안은 정치적 이슈의 발생에 따라 대응하게 되어 일관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3. 統一國家의 性格分析

통일국가의 性格 論議는 통일국가의 社會正義가 무엇인가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재야인사들의 통일논의로부터 유추되는 사회정의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이며, 통일국가체제의 성격은 民衆主體의 社會民主主義 실현이다. 사회정의를 현사회의 소외계층인 民衆을 위한 평등성 강조에 두는 학생운동권의 통일 방안에서 제기되는 통일국가체제는 社會主義에 가까운 사회민주주의(NL계열)나 사회주의(PD계열)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민족과 개인의 존엄성 회복과 유지를 목표로 하는 基督教社會主義를 추구한다.

4. 綜合分析

재야통일론은 남한의 내부모순 때문에 남북간의 분단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한내부의 變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남북간 통합과정에 관한 한, 통일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非實踐的 統一案이라는 비난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통합을 위한 組織이나 機構의 역할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宣傳的 次元의 통일안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IV.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의 比較分析

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分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의 의미는 단순히 分斷의 空間的 回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이라는 未來指向的 概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통일개념에서 통일의 主體는 남북한지역과 海外에 거주하는 7,000만 韓民族 모두이고, 統一原則으로는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민주의 원칙은 민족성원 전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民族主義 概念까지 포괄하고 있다.

한편 統一過程에 있어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타당성과 실현성에 역점을 두어 통일을 위한 先決條件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통합절차 및 제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統一過程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번째 단계에서는 南北平和共存의 狀態를 이룩하는데 역점을 두고, 둘째 단계에서 「南北聯合」을 구성하고 「經濟·社會·文化 共同體」를 形成하며, 셋째 단계에서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統一을 완수하게 된다. 또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에 필요한 절차 및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통일국가의 追求目標은 福祉國家의 달성으로 자유, 인권, 행복이 통일국가가 추구할 최고의 善이 된다. 정치적으로는

自由民主主義體制 수립 및 유지를 目標로 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는 資本主義를 바탕으로 使用者와 被雇用者들간의 타협과 협조가 이루어지는 後期産業資本主義 性向의 체제가 선택된다.

2. 在野統一案과의 比較分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위에서 分析한 「재야통일안」을 비교할 때, 統一의 당위를 설명하기 위해 民族主義 理念을 사용한다는 점과 남북한 통합을 위해 平和的 接近方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다. 특히 세부적인 평화적 통합방법의 내용으로 段階的 統合節次의 선호와 地方分權體制인 聯邦制 혹은 聯合制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차이점으로는 첫째, 統一主體의 범위, 둘째, 統一概念, 셋째, 統一原則, 넷째, 南北統合過程에서의 組織과 制度에 대한 각 통일안의 制度化 水準, 다섯째, 統一의 先決課題 언급 여부, 여섯째, 統一國家의 性格에서의 상이성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兩側案의 상이점은 재야통일논의들이 갖는 불완전성과 낮은 실천성에서 기인되는 것이므로 包括性, 實踐性, 開放性에 있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상대적 우월성이 확인된다.

V. 結 論

본 연구의 결론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재야통일안」간의 상호 절충 및 수렴이 어렵기는 하나, 다음의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갖는 包括性 및 開放性으로 인해 그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로 현재의 한국 정치·경제·사회체제를 발전시켜 재야통일안이 내세우는 통일개념에서의 民族矛盾과 階級矛盾을 극복하는 것과, 둘째로 統一節次 및 制度의 차이를 남북간의 緊張緩和와 한국사회내에서의 統一論議 開放化로 줄여나가는 것이다.

目 次

I. 序 論	1
II. 在野統一案에 대한 歷史的 接近	5
1. 在野統一論議의 展開過程	5
2. 在野統一案의 役割 및 位置	7
III. 在野統一案 分析	9
1. 理念分析	9
가. 통일개념	9
나. 통일주체	12
다. 통일원칙	14
2. 過程分析	16
가. 선결과제	16
나. 통일절차 및 제도	19
3. 統一國家의 性格分析	28
가. 통일국가의 추진목표	28
나. 통일정부 형태	30
4. 綜合分析	32
IV.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의 比較分析	36
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分析	36
가. 이념분석	36

나. 과정분석	37
다. 통일국가의 성격분석	38
라. 종합평가	39
2. 在野統一案과의 比較分析	39
V. 結 論	44
※ 參 考 文 獻	46

I. 序 論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蘇聯 및 東歐 社會主義國家들의 共產主義 拋棄와 獨逸統一로 말미암아 통일에 대한 현실적 기대가 높아져 왔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國論이 收斂된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한국사회내에서는 통일이 차지하는 높은 위상 때문에 政府次元에서부터 民間次元에 이르기까지 많은 統一方案들이 제시되어 각 방안들간 정당성을 다투어 왔다. 한국정부는 1989년 8월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통일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바, 이 통일방안은 開放性, 現實性, 包括性, 그리고 未來像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통일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民間에서는 현한국사회 구조의 불완전성 또는 모순성을 지적하는 反政府性向의 組織이나 個人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고 각각의 이해에 따라 다양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통일방안에 대한 國論收斂이 어려운 현실이다. 더욱이 이들은 각각, 또는 連帶的으로 統一運動을 전개하면서 大衆化를 모색하여 왔기 때문에 통일방안에 관한 전국민적 合意導出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대중의 관심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다

양한 통일방안을 어떻게 聚合하고 국론을 收斂할 것인가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으며, 다만 그 필요성만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在野라고 불리우는 民間의 統一論議들을 살펴 각 방안들의 유사점과 상이점, 그리고 논리의 適實性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통일정책의 합의도출에 앞서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야 민간차원의 통일방안들을 대상으로 몇가지 基本問題들을 제기하고 答을 구하여 보도록 한다. 그 문제들은 첫째, 어떤 특징들이 각 통일방안들을 서로 구별되도록 하는가, 둘째, 어떠한 공통점들이 이들 가운데서 찾아지는가, 셋째, 정부의 통일방안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등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在野統一案」은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한 制度圈 밖의 개인이나 조직의 통일논의로 이해하고, 이러한 재야통일안의 개념에 입각한 연구대상을 선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원칙을 설정하기로 한다. 첫째, 특정한 상황에 대해 一回적으로 對應하고 있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통일이념, 통일과정, 또는 통일국가의 성격이 포함되는 체계화된 統一案일 것과, 둘째, 개인이나 집단의 통일운동에 방향제시 기능을 하고 있는 持續性있는 統一案일 것이다.

이러한 통일안 選別 原則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대상을 선택하기로 한다:

－ 재야 원로인사들이 주장하는 통일안: 문익환의 「3단계 연방제통일론」, 백기완의 「반외세민중통일론」, 김낙중의 「3차 7개년 계획에 의한 평화통일방안」

－ 학생운동권 및 지식인들의 통일안: 自民鬪(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위원회: NL계열)¹⁾와 民民鬪(반제 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 PD계열)²⁾의 통일논의³⁾

－ 宗教界 통일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KNCC) 통일안⁴⁾

- 1) 「자민투」는 「민족해방 민주민주주의혁명론」(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추종조직을 말하며, 이 조직의 결성은 1986년 봄 「전학련」 조직 중 「총학생회」로부터 연유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들의 조직논리는 1985년 가을의 「반제직접투쟁론」으로부터 찾아진다. 윤석인, “1986년 상반기 학생운동 내부논쟁 개관,” 박현채·조희연 공편, 「한국사회구성체 논쟁 I」(서울: 죽산, 1991), pp. 341~344.
- 2) 「민민투」란 「반제 반파쇼 민족민주혁명론」(Anti-Imperialism Anti-Fascism 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 추종조직을 말한다. 민민투의 조직은 민족민주혁명론(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 ND) 주장자들로부터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1985년 결성된 「삼민鬪」가 전신이다. 위의 논문.
- 3) 1988년 이전까지 학생운동권은 자민투(NL)-제헌의회(Constituent Assembly: CA) 구도로 진행되어 왔으나, 그 이후 CA계열은 양분되어 NL계열과 PD계열로 흡수되었다. 그중 일부는 ND(社勞盟이 중심임)계열로 다시 독립되었으며, 1988년 이후 전반적인 학생 운동권은 NL-PD 구도로 재정립되었다. 김광 외, 「학생운동논쟁사 2」(서울: 일송정, 1991), p. 10; 박현채·조희연 공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I」(서울: 죽산, 1991), pp. 109~110, 116~118.
- 4) 종교계 통일운동은 기독교 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천도교 등에서도 전개되고 있으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제외한 여타 종교단체들은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들의 활동은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일회성 선언 또는 단순한 제의에 머무르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천주교정의 평화위원회 북한선교위원회」는 1987년 2월 “통일에 관한 한국천주교회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민족화합공동올림픽추진 불교본부」는 1986년 6월 12일과 1987년 7월 21일 각각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에 보내는 서한”과 “조선불교도연맹에 보내는 2차 공개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統一案은 통일이념, 통일과정, 통일국가의 성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이념, 통일과정, 통일국가의 성격을 分析單位로 하여 각 재야통일방안들을 비교·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야통일방안들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비교하고자 한다.

統一理念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범주에서는 통일개념, 통일주체, 통일원칙을 다루며, 통일과정에서는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일의 선결조건과 통합절차 및 제도를 고찰한다. 통일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統一國家의 성격분석에서는 통일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의 형태와 통일국가가 추구할 未來像 등을 다룬다.

Ⅱ. 在野統一案에 대한 歷史的 接近

1. 在野統一論議의 展開過程

분단 이후 1972년 7.4공동성명에 이르기까지 한국내에서 통일논의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는 冷戰時代의 產物인 남북간의 理念競爭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를 엄격히 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의 혼합산물로서 국민들 사이에 퍼져있던 통일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다. 또한 국민 사이에 통일논의가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통일운동을 주도할 조직이나 개인이 등장하기 어려웠던 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었다. 다만 4.19 혁명후 학생들 사이에서 조국분단의 책임을 남북한 정부에 묻고 남북간 문화·서신·학생 교류의 주장들이 있었으며,⁵⁾ 민족민주인사들 사이에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가 조직되어 自主·民主·平和의 統一原則을 천명하는 통일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개인적으로는 황용주가 1964년 단계별 방법의 연방제 통일안을 제시하여 통일운동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이 당시 재야의 통일운동에 영향을 준 통일관련 제안으로는 서민호의 「군비축소 제안」(1967),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1971) 등이 있다.

5) 전대협산하 평화적 조국통일촉진 학생추진위원회,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서울: 남풍, 1988), pp. 141~142.

1972년 이후 1980년대 초까지의 維新政府 아래서 통일운동에 대한 政府의 統制는 과거보다 더 엄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통일논의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 1971년 4월 결성된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대표 김재준)는 7.4공동성명 이후 남북한 통일논의에 민중의 참여를 허가하도록 정부에 요구한 바 있으며, 이 협의회에 가담하여 활동한 장준하, 천관우, 함석헌, 문익환 등은 「민중의 주체성」과 「민주화와 통일의 불가분성」을 주장하여 이후 在野統一運動의 논리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의 학생운동은 독자적인 통일논의와 운동을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재야민주인사의 통일논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원세력이었다. 한편 다수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통일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의 활동은 종교활동이 아닌 반정부 활동으로 民主化運動의 일환이었다.

1980년대 초반에 在野運動圈에서 「한국사회구성체 논쟁」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재야통일운동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1990년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재야인사들의 통일논의는 다양하나 영향력 있는 論議者들로는 「3단계 연방제통일론」의 문익환, 「반외세민중통일론」의 백기완, 그리고 「3차 7개년 계획에 의한 평화통일방안」의 김낙중 등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의 통일논의는 한국사회의 性格論爭으로부터 시작되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전개되어 왔는데, 그 하나인 NL계열은 한국사회를 「신식민지 半자본주의사회」로 보고 통일의 前段階로 外勢의 逐出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하나인 PD계열은 한국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로 간주하여 파쇼獨裁政權을 民主政府로 대체하는 단계를 통일의 선행단계로 보고 있다.

이 시기의 宗教界는 불교계나 기독교계에서 남북교류를 제의하는 등⁶⁾ 통일논의를 순수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하여 제한된 범위이긴 하나 종교인의 역할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통일에 대한 기본원칙과 선결과제의 제시는 종교계가 統一論議에 구체적인 참여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2. 在野統一案의 役割 및 位置

한국사회의 통일논의는 정부의 運動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在野의 정부에 대한 反統一行態 비판으로 서로 절충의 여지없이 상충되어 왔다. 따라서 재야는 항상 정부에 대해 비판적 위치에 서게 되고, 재야의 통일논의는 다음과 같은 逆機能을 수행한다고 비판을 받아 왔다. 첫째, 정부안과 상충되는 부분의 타협이 어려우므로 통일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는 점이고, 둘째, 정부의 통일논의에 대해 반대의 위치에 있으므로 정부의 논의와 재야의 논의를 무리하게 절충하려는 비현실적이고 감상적인 통일논의

6.) 이와 관련하여 1988년 7월 12일 世界佛敎徒會(WBF) 한국본부측은 「남북한 세계불교도회 임원회의」의 개최를 요구하였고, 1988년 8월 1일 전국목회자 정의실천협의회는 「남북기독교목회자 상호 교류」를 제의한 바 있다.

의 등장소지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逆機能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야통일 논의는 한국사회내에서 소수의견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 온 것도 사실이다. 첫째로 정부와의 대립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에 의해 봉쇄·독점되어 온 통일논의를 大衆에게 開放시키는데 기여하여 왔다는 점이고, 둘째로 남북의 이데올로기 대립차원에 머물던 종래의 통일논의 범위를 남한내부에서나마 정치·군사·경제·사회 등의 측면으로 확대시키는 촉매역할을 한 점이다.

Ⅲ. 在野統一案 分析

1. 理念分析

가. 통일개념

在野에서는 統一을 단순히 남한과 북한이 空間的으로 結合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들은 통일의 달성이 分斷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하다는 논리로 現韓國社會의 성격에서 分斷의 원인을 찾고 있으므로 諸系派들이 한국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통일의 개념 및 과정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각 개인과 조직이 分斷의 원인과 한국사회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 통일의 개념을 연구하는 첩경이다.

우선 재야 민주인사들의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外勢의 식민지성과 현정부의 파쇼·독재성향을 統一沮害要因으로 간주하여 이의 극복을 통한 민중해방과 민주주의 달성을 통일과정의 前半部로 여기며 남북의 空間的 統合을 통일의 後半部로 인식한다.

문익환에 의하면 分斷은 남과 북의 민중이 客體가 되어 피동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므로 통일은 소외된 민중계급이 민주화를 통해 主體의 위치로 옮겨감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民主化의 結果로부터 산출되며, 민주와 통일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주는 고리는 남과 북의 민중을 모

두 포함하는 民族의 개념이라는 것이다.⁷⁾

백기완은 통일을 韓民族이 평화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보고 전반부에서 남한사회가 외세로부터 自主性을 回復하고 일제잔재의 청산을 통한 반민족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南北結合이라는 통일 후반부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⁸⁾

제야인사 중 김낙중은 예외적으로 變革的 民主化가 아닌 보다 온건한 입장에서 출발한다. 그는 분단된 상태를 이미 발생한 현실로 받아들여 남한과 북한지역에 있는 統治權 보유자의 實體를 서로 인정하고 쌍방간 합의에 따라 하나의 主權國家를 창출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단순화시키고 있다.

학생운동권 중 주체사상에 충실한 NL계열의 통일에 대한 이해는 民族矛盾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들은 조국의 분단이 미국과 일본의 帝國主義에 의한 것이고 남북간 통일도 이들의 新植民地 경영에 의하여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NL계열은 남한정부를 제국주의 외세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간주하고 남한에서 외세를 축출하면 남한정부는 자연히 붕괴되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⁹⁾

NL계열과는 다르게 분단의 지속원인을 階級對立으로부터

7) 문익환, “연방제통일의 3단계과정,” 國土統一院, 「民間次元의 統一運動과 南北交流: 在野 및 運動圈의 統一論議 資料」(서울: 國土統一院, 1988), pp. 80~81.

8) 백기완,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서울: 시인사, 1989), pp. 91~103.

9) 학생운동권 논의에 관해서는 박현채·조희연 공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 김광 외, 「학생운동논쟁사 2」(서울: 일송정, 1991) 참조.

찾고 있는 PD계열은 맑스·레닌주의의 노동자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를 社會正義가 실현된 사회로 보고, 한국사회의 계급적 모순이 해결되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이들은 현 정부를 부르조아계급의 支配手段으로 보고 노동자계급의 革命으로 프롤레타리아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이미 노동자 혁명이 성취된 북한과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外勢는 부르조아독재의 협조자 위치에 놓이므로 노동자 혁명을 통하여 극복되는 존재로 본다.¹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통일의 당위성을 民族의 共同善과 인간의 자유 및 존엄성 보장으로부터 찾는다.¹¹⁾ 즉 조국의 분단은 민족의 예속화를 가져왔고 기독교의 反共化로 인해 북한 동포까지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통일을 통한 민족의 再結合으로 존엄성을 되찾고 自由를 보장받는 人道主義 統一이 통일의 주된 개념인 것이다.

이렇게 통일의 개념을 살펴보면 재야에서 통일을 이해하는 시각에는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재야의 제세력들은 분단의 지속상태에 대한 원인을 北韓의 政體나 정책 또는 社會構造에서 도출하지 않고 南韓의 정치·사회構造나 性格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통일운동 방향이

10) 박현채·조희연 공편, 위의 책, pp. 344~352; 김광 외, 위의 책, pp. 90~95; 이민수, “민중적 통일인가? 부르조아적 통일인가?” 『高大文化』, 제34호 (1991. 6), pp. 80~81.

11) 國土統一院, 「政黨·團體·個別人士 統一論議」(서울: 國土統一院, 1989), pp. 58~59.

한결같이 남한정부의 民主化와 自主化로 귀결되고 있다. 둘째, 系派를 초월하여 모든 재야세력은 통일이 갖는 利益 혹은 共同善의 성격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셋째, 학생운동권의 PD계열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야세력이 민족의 결합상태를 통일로 이해하고 통일의 當爲性도 민족의 개념으로부터 도출하고 있다. 이는 民族主義 理念이 통일논의에서 최상위에 위치하여 통일운동의 방향이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위의 개념을 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 통일주체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통일에 대한 在野의 視角에서는 분단의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계급모순, 민족모순, 또는 不正義한 비인도주의적 사회구조 등의 극복을 통일의 첫단계로 삼고 있다. 재야통일론에서는 모순극복의 주도세력으로 소외 계층(혹은 계급)인 民衆을 제시하고 극복대상인 정권담당자나 기득권층 또는 지배계급을 배제함으로써 통일의 주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이 경우 한국사회 성격규정에 있어서 계급모순보다 민족모순을 중시하는 系派들도 階層分類를 도입하여 민중이라는 소외계층을 설정하고 이들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되는 민중의 개념은 통일의 개념에 따라 각 계파마다 상이하며 범위와 역할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재야인사들은 민중을 다수의 정치적·경제적 소외계층으로 이해하여 비교적 신축적이고 광의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익환의 민중은 7,000만 민족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문익환은 被支配階層의 주도로 지배-피지배관계가 一掃되는 민주화가 통일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으므로 소수의 反民主 勢力, 즉 정권이나 기득권유지에 관심이 있는 기존 지배층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²⁾ 단 이러한 문익환의 주장에서는 민주화의 과정이 국가의 이념 및 체제의 변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백기완의 민중개념은 民族概念을 代替하고 있으며, 親日分子 및 봉건지배계층의 反民族主義者들을 제외한 다수의 노동자·농민·소자본가·지식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다른 재야인사와 달리 김낙중은 민중을 언급하지 않고 통치주체로서 남북한 兩政府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운동권의 경우 NL계열에서는 남한내의 민주화과정에서는 통일의 주체로서 노동자·농민, 그리고 변혁의 의지를 갖는 知識人과 小資本家까지를 포함하며 남북간 통일과정에서는 남북한 민중 모두를 포함한다.¹³⁾ 이들의 주장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역할은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PD계열에서는 민주화 및 통일의 주체로 노동자만을 인정하며 여타 계층인 농민과 청년학생들은 노동자와 연대하여 활동해야 하는 것으로 보

12) 위의 책, p. 89.

13) 윤석인, "1986년 상반기 학생운동 내부논쟁 개관," pp. 351~352.

고 있다. 이들은 가장 다수이며 조직이 용이하고 경험이 많은 노동자계급 주도의 통일운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PD계열이 인식하고 있는 社會性格은 계급간의 대립이므로 지배계급으로서 자본가계급은 어느 경우에라도 타협 및 연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¹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민중개념을 통일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통일을 염원하는 다수의 사람들로 보고 이들의 참여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통일의 첫 단계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統一主體는 민족이라는 개념아래 소수 매국세력만을 제외시키는 광의의 민중이다.

일반적으로 在野統一案에서 보여지는 통일주체는 범위가 不確實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나, 한편으로는 주체설정에 서 보이는 재야세력들간의 두가지 공통점, 즉 민중이라는 용어 공유와 남한사회에서 기독교층의 배제는 재야통일운동의 連帶的 遂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다. 통일원칙

통일원칙에 있어서는 재야의 모든 세력이 공히 自主, 平和, 民族大團結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는 바, 이들 원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주의 원칙은 反外勢·民族主體의 원칙으로 통일문제에

14) 위의 논문; 강영수, “노동자와 통일운동,” 「노동자와 통일」(서울: 나라사랑, 1988), pp. 69~74.

관한 한 어떠한 외국의 역할도 용납하지 않는 硬直性을 갖는다. 이들에게 통일은 민족내부의 문제라는 입장과 외세 간섭의 축출이라는 二重的 構造의 문제이기는 하나, 그 어느 방향으로부터의 접근에서도 자주의 원칙은 견지된다. 이런 면에서 재야인사들이나 학생운동권 모두는 민중만의 參與를 통하여 통일운동에서 反外勢 民衆自主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고 있다.

평화의 원칙은 남한내부의 獨裁政權의 폭력을 거부하고 남북간의 戰爭可能性을 排除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한 실천 방안은 남한에서의 민주정부 수립, 반민중적 악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미핵무기 철수, 평화보장방안의 구체화 등이 있다. 이러한 실천방안을 통하여 정치·군사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국내 및 남북간 平和秩序를 제도화시킨다는 것이 평화원칙의 목표인 것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사상·이념·제도를 뛰어 넘어 민족모순이 극복된 民族的 民主政府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NL계열의 주장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동포와의 동질성 회복 및 적대감 해소 단계까지도 포함된다.¹⁵⁾ 특히 운동권 학생들은 민족대단결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기득권세력을 배제한 노동자·농민·양심적 시민·학생·지식인 등으로 구성되

15) 전대협 산하 평화적 조국통일촉진 학생추진위원회 편,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p. 176; 한신대학 총학생회 학술부, 「통일국가론 입문」(서울: 남풍, 1988), p. 91.

는 민중세력이 統一戰線을 결성하고 반외세, 반독재, 반예속을 위하여 연대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통일원칙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 외에 人道主義와 民衆主體의 원칙을 추가한 5대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인도주의와 민중주체의 원칙은 자주와 평화의 원칙이 갖는 민주성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국가나 민족보다 앞선 인간 본연의 자유와 복지의 보장요구와 소외계층의 우선적 참여보장이라는 민주적인 平等原則을 강조하는 것이다.¹⁶⁾

2. 過程分析

가. 선결과제

재야인사들이 언급하는 統一을 위한 先決課題의 주된 내용은 통일의 전반부를 이루는 남한의 民主化와 自主性 확보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남한사회의 경제적 예측, 사회적 불평등, 서구가치 지향적 문화 등의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핵기지 철폐, 남북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면에서 민중 주도의 自主·民主·平等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각 인사 및 계파의 선결과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國土統一院, 「政黨·團體·個別人士 統一論議」, pp. 58~59; 세계기독교 한반도평화협의회, “민족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기독교청년의 입장,” 위의 책, p. 91.

같다.

문익환은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남한체제의 민주화 달성,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냉전논리의 척결, 남한내의 평등과 北韓에서의 自由의 提高, 남북한간 불가침조약과 군비축소를 포함하는 한반도에서의 平和協定 締結, 그리고 미군의 철수 등을 열거하고 있다.¹⁷⁾ 한편 백기완은 선결과제로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언론·사상·학문·정치, 그리고 긴장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들고 있다.¹⁸⁾ 「3차 7개년 계획에 의한 평화통일방안」을 주장하는 김낙중은 聯合段階의 진입을 위해 남북한 불가침협정과 평화협정 체결, 쌍방의 비민주적 법률개폐, 부분적 교류 시작을 들고, 聯邦段階를 위해 미군철수, 군비축소, 문화·경제통합, 주민의사 표시 자유보장, 거주 이전의 허가 등을 연합단계에서 실천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⁹⁾

학생운동권 중 NL계열은 선결과제로서 통일주체의 자기형성 및 자기정립, 통일문제 당사자 확정, 통일지향적 공존체제 구성을 위한 민족대단결, 군비축소 및 평화체제 구축, 핵무기 폐기, 광범위한 대중참여, 남북대화의 창구 다원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²⁰⁾ 1988년 남북청년학생회담과 국토순례대행진 개

17) 문익환, “연방제 통일의 3단계과정,” pp. 80~81; 문익환, “민족통일을 위한 구체적 제안,” 國士統一院, 「政黨·團體·個別人士 統一論議」, pp. 85~86.

18) 백기완,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pp. 129~164.

19) 김낙중, “3차 7개년 계획에 의한 평화통일방안,” 金洛中·盧重善 編著, 「現段階 諸統一方案」(서울: 한백사, 1989), pp. 120~124.

20) 한국신학대학 총학생회 학술부, 「통일국가론 입문」, p. 53.

최를 주장한 김종기의 통일론을 보면 네가지 선결과제가 언급되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정당·사회단체·개별인사의 정치활동 자유보장, 양심수 석방, 보안법 철폐, 국민의사를 대변하는 정부수립 등이 내용이 되는 南韓社會의 民主化, 둘째, 남북 상호 불가침조약, 군비축소, 주한미군 철수, 북한과 미국간의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韓半島에서의 군사적 긴장관계 해소, 셋째, 한·미 상호 방위조약 폐기와 군작전지휘권 반환으로 외세의 내정간섭 종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조건 이행을 위한 相互 檢證 등이다.²¹⁾

PD계열의 통일논의자들은 「先남한사회변혁 後통일」을 위해 부르조아 독재의 수단이 되는 反共思想 및 보안법의 철폐, 주요산업의 사회환원, 근로자 보호정책 실시 등을 통일의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선결과제로서 이산가족 재결합을 통한 분단상처 치유, 언론 및 정보의 교환으로 남북간 동질성 회복기반 마련, 평화협정과 군사문제 해결로 긴장완화 및 평화증진, 그리고 자주적·주체적 입장에서 남북협상을 할 수 있도록 民族自主性を 실현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²²⁾

이렇게 볼 때 재야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통일환경 조성의 선결과제는 크게 보아 內部問題로서 민주주도의 민주화

21) 허준혁, 「祖國統一모델에 關한 研究」, pp. 43~44.

2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pp. 59~62.

와 外部問題로서 미군과 핵무기의 철수로 요약될 수 있다.

나. 통일절차 및 제도

본 절에서 살펴 볼 統一節次 및 制度는 구조분석과 기능분석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構造分析의 내용으로는 정치적 통합 형태 및 체제구조를 포함시키고, 機能分析으로는 통합으로의 이행방법을 다루기로 한다. 논의의 전개는 첫째, 권력배분형태로 본 통합형태, 둘째, 통합과정의 정치조직 및 제도, 셋째, 남북간 통합방법 순으로 한다.

(1) 통합형태

분단의 장기지속 결과 남북한간에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異質性 문제가 多方面에서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統治理念의 차이로 인하여 재야의 제계파들도 남북한이 단기간에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제안하는 통합형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남북간의 이질성 극복방안과 정치적 이념의 차이에 대한 타협내용에 초점을 두어 統合의 段階性과 권력분산 체제형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재야인사들의 경우 먼저 문익환은 정치적 통합절차로 단계성과 남북간의 동등한 地域分權을 고려한 「3단계 연방제통일론」을 제시하고 있다. 3단계 중 첫째 단계는 외교·군사의 독자성을 허용하는 聯合段階이고, 둘째 단계는 남북간에 사회

경제체제만 독립성을 갖는 聯邦制段階이며, 셋째 단계는 세분화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실질적인 單一國家의 단계이다. 이를 보다 세분화시키면 첫째 단계는 평화협정 체결, 둘째 단계는 미군철수, 셋째 단계는 유엔동시가입, 넷째 단계는 연합 단계, 다섯째로 영세중립화 선언, 여섯째 연방제 단계, 일곱째로 지방자치제 단계로 나누어진다.²³⁾

백기완의 경우도 역시 남북간 통합절차를 1단계 민중주도의 民主政府, 2단계 남북간 民族聯立政府, 3단계는 단일민족 국가 수립 등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²⁴⁾ 이 안에서 민중주도의 연립정부는 반외세 민중해방 통일론을 바탕으로 하여 민중혁명의 과정이 선행되는 정부를 가리키며, 민족연립정부의 성격은 남북체제 모두를 용인하는 聯合制에 가깝다.

김낙중은 평화공존단계, 國家聯合, 聯邦制, 통일민족국가의 실현 등 4단계로 세분화된 연방제 통일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단계의 실현 기간은 1단계와 4단계의 완성에 각각 4년과 3년, 2단계와 3단계에서 각 7년씩으로 모두 21년에 걸친 통일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 방안에서 1단계는 최고당국자회담과 고위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평화통일협정 및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 협정을 체결하는 단계이며, 2단계에서는 민족최고회의와 단일국기 및 국가를 제정한다. 3단계에서는 연방국민의회의 구성과 헌법 및 법률의 제정, 그리고 연방상비군

23) 문익환, “민족통일을 위한 구체적 제안,” pp. 85~87.

24) 허준혁, 「祖國統一모델에 關한 研究」, p. 82.

을 창설하며, 4단계에서 남북총선거를 통한 통일민족국가를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²⁵⁾

위에서 논의한 세가지 통일안의 공통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段階別 聯邦制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간의 입장을 공평히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연방제가 過渡形態로 규정되고 있고 궁극적인 통일형태는 단일민족국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운동권의 통일방안에서도 이러한 단계성과 권력분산 형태의 聯邦制(聯合制 포함)가 통합의 형태로 고려되고 있으나, 이들에게는 최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남한내의 變革過程이 통합절차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는 통일문제가 단순히 남북한간 체제대립 현상의 극복만이 아니라 남한에서의 革命段階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복합적 사고의 통일논리라 하겠다. 실제로 학생운동권에서는 革命이 외세의 축출로부터 이루어지는가(NL계열), 또는 민중의 힘으로 남한정부를 전복시키고 그후 외세 축출로 마무리되는가(PD계열)의 순서가 論爭點이 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은 대체로 통일이 남한 변혁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는 기본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즉 학생운동권의 논리 역시 남한의 변혁과 남북한간의 통합이라는 단계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聯邦制 論理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25) 金洛中·盧重善 編著, 「現段階 諸統一方案」, pp. 120~124.

동등하게 참여하는 정부체제를 제시하나, 해외동포의 참여까지를 언급하고 있는 점은 특이하다. 학생운동권 논리의 구체적 사례로는 김영환과 김중기의 통일방안이 있다.

김영환의 연방제는 10段階로 되어 있는 데, 1단계에서는 남한국민의 주도하에 국가주권을 선언하여 미국과 같은 외세를 거부하고, 2·3·4·5단계에서 미군철수, 한·미군사동맹 철폐, 불가침협정 및 군비경쟁의 지양을 통하여 韓半島 平和體制를 구축하며, 6·7단계에서 한반도의 中立化를 수행하고, 8·9·10단계에서는 교류 및 총선거로 聯邦國家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⁶⁾ 연방정부는 남북한 대표만이 아니라 해외동포의 대표까지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대표의 선출방식 및 범위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중기의 연방공화국 창설안은 남한에서 국민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한반도에서 외세를 축출한 후 남북한 간 연방제를 통하여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聯邦制는 통일의 최종단계이며, 통일의 구체적 과정으로는 남북한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족통일정부 구성과 산하에 南과 北의 地域自治政府를 두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민족통일정부는 동수의 남북대표와 일정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구성되고, 각 대표의 권한은 동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²⁷⁾

26) 함운경 외, 「현단계 통일운동론 I」 (서울: 친구, 1988), pp. 149~151; 허준혁, 「祖國統一모델에 관한 研究」, pp. 41~43.

27) 허준혁, 위의 책, pp. 43~44.

김영환과 김중기의 두 통일론을 바탕으로 학생운동권 통일방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단계성과 연방제의 통합 외에 남한 정부의 獨立性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이들의 방안에서 보이는 弱点으로는 남한정부의 正當性을 부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북한정부의 정당성과 역할 혹은 기능에 대한 언급이 없고 통합이전의 남북한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실성 있는 통일방안이라 할 수 없고 理想的 統一論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통일방안은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남북한 현정부를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주최한 「도잔소협의회」²⁸⁾에서는 남북한간의 평화통일과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교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제가 제시된 바 있다.²⁹⁾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남북한간의 대등관계를 통한 점진적 통합 이외에 다른 통합형태가 없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통합과정의 조직 및 제도

문익환은 통합의 첫 단계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의 平和協定 締結을 중시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

28) 「세계교회협의회」는 1984년 10월 한반도 평화통일문제를 다루기 위해 일본 도잔소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의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9) 박종화, “통일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國土統一院, 「政黨·團體·個別人士 統一論議」, p. 69.

을 통하여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어온 한반도의 戰時狀態를 종식시키고,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과 나아가서 聯邦制가 실현되도록 한다는 의도이다. 유엔동시가입 제안 역시 이러한 목적의 일환이다. 연방제 1단계에서의 영세중립 선언 제안과 연방제 3단계에서의 道單位 지방자치제 제안은 대내외적으로 통일의 상태를 확인·보장시키려는 의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 백기완의 방안에서 제시되는 조직이나 제도로는 남북민중정치회담이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기능분류된 제안을 찾을 수는 없다.

김낙중의 통일안에서는 통일과정의 1단계인 平和共存段階에서 최고당국자회담과 평화통일협정 체결을 위한 常設代表部 설치, 고위군사회담 개최, 남북불가침협정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이 제안되고 있다. 2단계인 聯合段階에서는 남북동수 지역 대표로 구성되는 민족최고회의, 단일국가와 국기 제정, 유엔 평화보장군의 휴전선 배치 등이 제시되고, 3단계인 聯邦段階에서는 上院인 민족최고회의와 주민인구 비례의 연방국민의회 구성, 헌법과 법률 제정, 연방상비군 창설, 복수정당제와 완전공명 선거실시, 단일화폐 사용 등이 제안되고 있다. 마지막 民族共同體段階에서는 남북총선거 실시, 인구비례대표에 의한 국민의회와 지방단위제의 민족회의 구성 등이 제시되어 있다.³⁰⁾

30) 金洛中·盧重善 編著, 「現段階 諸統一方案」, pp. 120~124.

재야인사들의 제안에서 통합을 위한 제도와 기구의 설정은 김낙중의 통일안에서만 役割까지 고려하여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어 있고, 나머지 두사람의 통일논의에서는 통일과정을 수행할 제도나 기구의 언급이 별로 없다. 이는 앞의 두사람이 남북한의 통합과정보다 남한내의 民主化라는 통일의 선결조건 해결에 더 力點을 두고 있는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학생운동권의 통일논의에서도 통일과정 수행을 위한 제도와 기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거의 없다. NL계열의 경우 統一推進委員會의 설치 및 統一議會의 구성을 통하여 연방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 따라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地域選舉를 실시 하자는 제안이 있으나,³¹⁾ 이 제안도 양기구의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언급이 없는 취약점이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통일논의에서는 통일수행을 위한 제도와 기구로서 주한미군과 그들의 핵무기 철수를 논의할 남북한 및 미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3者 平和會談, 남북한 학생회담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이나 기구들은 지속성 있고 책임있는 정치기구가 아닌 一過性의 선전적 조직에 불과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의 통일논의에서는 통합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만큼 통합과정을 위한 조직과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國際機構(세계교회협의회, 국제적십자사, 유엔, 비동맹국가 등)의 활용과 한국교회가 주도하는

31) 김광 외, 「학생운동논쟁사 2」, pp. 96~97.

국제회의의 개최를 통한 統合推進 노력방안이 조직과 제도를 대신하여 제시되고 있다.

결국 김낙중을 제외한 재야통일논의자들은 남북한의 통합과정을 위한 조직 및 제도에 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으며, 이러한 性向은 남한의 민주화를 統一環境 造成의 관건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통합방법

통일을 위한 統合方法은 남북간 교류를 통한 평화적 방법과 경쟁과 폭력의 수단까지 포함하는 비평화적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남한의 민주화과정에서는 變革論理를 전개하는 대다수 재야의 통일논의자들도 남북한간의 통합방안으로 평화적 방법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각 재야안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도록 제안하고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기로 한다.

재야인사의 방안으로 문익환은 평화적 남북결합을 宣言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한간 인적·문화적·경제적 교류를 점진적이고 과감하게 실현시켜 나갈 것을 통일환경 조성의 한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다.³²⁾ 백기완의 통일논의에서는 남북간의 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남북학생회담이나 남북민중정치회담을 지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백기완 역시 남북통합에서 對話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32) 문익환, “민족통일을 위한 구체적 제안,” p. 89.

보여진다. 김낙중의 논의에서는 평화통일의 의미가 「남북 쌍방간의 합의통일」로 구체화되고 있다.³³⁾ 이를 위한 남북간 교류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평화공존단계에서의 부분적 교류협력과 연합단계에서의 문화·경제적 교류협력, 그리고 연방단계에서의 경제공동체 형성 등의 段階的 方案이 제시되고 있다.³⁴⁾

학생운동권의 교류주장은 경제와 사회면에서의 교류에 앞서 남북한 학생의 국토종단순례 대행진과 체육대회 개최 제의에서 출발하였다.³⁵⁾ 이후 김중기의 통일안에서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위해 對外合作의 자유로운 허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김영환의 통일안에서는 상호 주민교류와 홍보활동을 통한 相互信賴增大에 역점을 두고 있다.³⁶⁾ 즉 학생운동권의 주장에서도 남북사회단체의 교류를 중시하여 民間交流段階를 설정하였고, 남북간 경제 및 사회교류를 통일의 한 측면으로 간주하여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기독교교회협의회)의 통일방안에서는 民族共同體 形成을 통일국가 수립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平和共存의 틀을 가시화시키는 노력을 언급하고 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교회가 남북교회의 상호 왕래 실현

33) 金洛中·盧重善 編著, 「現段階 諸統一方案」, p. 114.

34) 위의 책, pp. 118~119.

35) 1988년 다섯 차례에 걸친 김중기와 전대협외의 제안이 있었다. 國土統一院, 「民間次元의 統一運動과 南北交流」, pp. 105~120.

36) 허준혁, 「祖國統一 모델에 관한 研究」, pp. 43~45.

을 위해 세계교회와 협력하고, 또한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서신왕래 가능성 모색 및 헤어진 친척, 교우, 친구 찾기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³⁷⁾

재야의 통일방안에서 논의된 南北間 接近方法에서는 機能的 交流·接近의 有用性이 부정적으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한간 동질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交流의 독립적 기능이 강조되지 못하고,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가 政治的 接近을 목적으로 手段化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각 통일안에서 보이는 교류 및 접근 제안은 정치적 이슈의 발생에 따라 대응하게 되어 일관성과 체계성이 결여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3. 統一國家의 性格分析

가. 통일국가의 추진목표

민중주도 統一民主政府의 이념과 가치 정립문제는 재야인사들의 통일논의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나, 다만 그들의 통일의 개념 및 선결과제에서 推論된다. 재야인사들의 통일안에서 민족의 統一은 외세 및 독재로부터의 民主回復, 즉 민중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주는 과정으로 제시됨으로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통일국가 價値體系의 基準이라고 볼 수 있

3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pp. 64~65.

다. 실제로 문익환은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에서 北韓에서의 자유의 고양 요구와 南韓에서의 경제적 불평등구조와 자유의 억압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으며, 백기완은 통일이 달성되면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분단의 긴장으로부터의 자유가 민중에게 보장되어 진다고 주장한다.³⁸⁾

김낙중은 남북간의 타협적인 統合을 강조하여 민족의 平和와 安全을 중시하나, 통일개념 및 통일주체에 대한 언급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체제의 인정 및 유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南韓에서의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自由와 秩序를 통일국가 가치체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야인사들의 통일방안처럼 학생운동권의 통일방안에서도 구체적인 통일국가 추구 목표나 가치체계 정립 시도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社會正義를 현사회의 소외계층인 민중을 위한 평등성 강조에 뒤편으로써 통일국가의 권력배분 수혜대상에서 既得權層을 배제하는 民主主義의 제한적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학생운동권의 가치체계는 민중을 위한 권력배분의 平等이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글)의 통일방안에서는 人道主義에 立脚한 화해 및 평화의 상태를 추구하여 궁극적으로 민족과 개인의

38) 백기완, 「자주그를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pp. 129~157.

존엄성 회복과 유지에 통일의 當爲가 부여된다.

나. 통일정부 형태

재야 각 계파의 통일논의에서 통일정부 형태에 대한 언급은 유보되고 있거나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통일의 개념과 주체, 그리고 통일국가의 추구 목표 분석을 통해 유추하는 것은 가능하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재야통일논의에서 보여지는 統一의 主體는 民衆이며 통일국가의 추구 목표는 自由와 平等의 보장 및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통일논의로부터 추정되는 政治體制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및 권력의 평등한 배분을 위한 民主主義가 될 것이며, 사회·경제체제로서는 富의 평등배분과 지배관계의 철폐에 기초한 민족적 성향의 社會主義 혹은 社會民主主義가 유추될 수 있다.

재야인사들이 주장하는 궁극적 통일국가형태는 民族概念에 기반을 둔 단일민족민주국가를 설정하고 있다. 이 민족민주국가는 기득권층이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民主主義하에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게 되어 정치권력이 民主主義로 배분되는 民衆民主主義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민중이 수혜대상이 되는 사회·경제체제 역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帝國主義를 배척하는 민족주의와 실질적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성격이 혼재된 체제를 갖는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문익환의 통일논리로

부터는 통일주체 설정요소인 계급구조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資本主義에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되는 社會民主主義體制가 유추되고, 小資本家階級까지를 통일주체에 포함시키는 백기완의 통일논리에서는 외세의 축출을 통한 민족자본주의와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의 混合體制가 이상적 체제라고 파악된다. 현정부를 통일주체로 인정하는 김낙중의 통일안은 남한의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인정하고 여기에 국영기업제를 혼합하는 社會民主主義 성격을 선호한다고 평가된다.

학생운동권의 논의에서 언급되는 통일국가의 성격 역시 정치적으로는 民衆이 주체가 되어 평등성을 강조한 권력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民衆民主主義體制이다. 그러나 NL계열과 PD계열의 정치체제는 동일하지 않다. NL계열의 논리에서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배제된 민중민주주의이나, PD계열은 권력배분과정에서 농민과 기타 비근로자를 제외하고 노동자만이 권력배분의 수혜대상이 되는 노동자 獨裁의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한다.

통일국가의 사회·경제체제에서도 NL계열과 PD계열은 차이를 갖는다. 帝國主義 外勢의 축출에 일차적 관심을 갖는 NL계열의 통일주체에는 민족자본가가 포함되며 타도의 대상은 외세의 앞잡이인 정권담당자이다. 따라서 이들이 설정하는 사회·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성향과 민족주의 성향을 부인하지 않고 사회주의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되는 변형된 社會民主主義

體制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체제는 통일을 전후한 과도기적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에는 사회주의로 이행될 것이 예상된다.³⁹⁾ 한편 PD계열에서는 근로자 중심의 變革을 통해 자본가계급(생산수단 독점계급 및 소자본가계급)이 타도되고 無階級性 사회주의체제가 선택되어질 수 밖에 없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역시 통일국가의 정치 및 경제·사회체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유추 가능한 체제로서는 人道主義와 平等主義를 강조하는 基督教社會主義라고 할 수 있다.

4. 綜合分析

각각의 재야통일안들이 갖는 相異點과 共通點을 중심으로 재야통일안의 특징을 검토하면 각 통일안이 갖는 상이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로 통일개념상에 나타나는 統一의 必要性을 보는 시각의 차이이다. 각각의 방안들이 남한내부의 不正義 상태나 외세의 침략, 계급모순, 또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아 통일을 보는 관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둘째는 統一主體 설정의 차이이다. 이러한 차이는 통일개념

39) 이들은 資本主義 大國인 미국과 일본의 帝國主義에 반대하므로 통일국가의 경제사회체제 구성에서도 資本主義 모델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통일주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서 연유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문익환과 백기완, 그리고 NL계열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각각의 주체가 갖는 범위의 차이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상의 상이점을 갖는다. 한편 후자의 경우 PD계열과 다른 재야 계파는 주체 설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D계열은 勞働者階級の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민중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비해 여타 재야계파의 주체는 광범위한 계층의 聯合性을 강조하여 민중개념이 불명확하다. 김낙중의 논의는 통일의 주체로서 현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후자의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셋째는 각 통일방안에서 다루고 있는 統一節次의 차이이다. 이는 통일개념의 차이에서 연유하며 외세의 축출을 통한 自主性 確保나 남한의 민주화과정과 統一의 先後에 관한 문제가 바탕을 이룬다. 문익환과 백기완의 통일논의에서는 통일문제에 관한 한 민중주도의 문제가 중시되고 민중을 통일주체의 위치에 올려 놓는 어떠한 과정도 통일의 과정으로 이해하므로 통일과정과 민주화과정 사이에 同時性이 찾아진다. NL계열에서는 민주화의 과정으로 외세의 축출을 통하여 自主性을 확보한 후 통일을 이룬다는 순서이며, PD계열에서는 남한내의 노동자계급 독재가 통일의 과정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김낙중의 통일안에서는 민주화과정 없이 통일의 과정만을 통일의 절차로 언급한다. 통합과정에 관한 조직 및

제도의 언급에서 보여지는 각 통일안간의 차이도 여기에서 연유한다.

넷째로 각 통일방안은 統一後의 國家體制에서도 상호 차이를 나타낸다. 문익환의 사회민주주의 성향, 백기완의 민족주의적 자본주의, 김낙중의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NL계열의 과도기에서의 사회민주주의와 이후의 사회주의, PD계열의 사회주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基督教社會主義 등이 위에서 보여진 예이다.

재야의 통일안들이 이러한 차이를 가지면서도 재야세력들의 連帶性 活動이 가능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共通點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공통점이란 첫째, 각 통일안에서 통일과 민주주의 連繫性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통일의 전반부 과정을 民主化鬭爭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둘째, 재야의 각 통일안은 「민중」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낙중의 통일안을 제외한 각 통일안은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범위나 역할이 다른 통일주체를 설정하고 있으나 공히 疏外된 民衆階層이란 용어를 통일의 주체에 사용한다. 셋째, 打倒對象으로 기독교층이 공유된다는 점이다. 기독교의 의미가 각 방안에 따라 정치권력, 富의 소유 등으로 달라질 수는 있으나 민중개념이 民族概念으로 대체되어 공동의 타도대상 역시 소수의 반민족적 상위계층으로 제한되어 선정된다. 넷째, 통일과정의 단계성과 연방제적 결합형태에서의 공통성이다. 다섯째, 각 통일안들이 統一原則에서 民族主義 개념을 최

고의 이념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평화적 교류 협력을 통한 기능적 통합방법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남한내부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무제한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각 재야세력의 變革論理의 過激性을 온건하게 보일 수 있도록 위장시켜 준다.

재야통일론은 남북간의 分斷이 持續되고 있는 근본이유가 남한내부의 모순에 있다고 인식하여 통일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남한내부의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남북간 統合過程에 관한 한 북한의 변화에 따른 통일여건의 변모과정에는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비현실적 통일안이라는 비난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組織이나 機構의 구체적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어 宣傳的 次元의 통일안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IV.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의 比較分析

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分析

가. 이념분석

이념분석의 내용으로 우선 살펴 볼 부분은 統一의 概念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보여지는 통일은 단순히 분단의 공간적 회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韓民族의 자유·평화·복지증진·안전보장 등이 획득되는 과정을 함께 의미하여 民族共同體의 회복과 발전이라는 미래지향적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따라서 이 통일안에서의 통일개념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온 分斷狀態 해결과 함께 해외동포와의 共榮 및 남한내에서 不正義 상태의 극복까지를 포함함으로써 한민족 전체의 동질성 확보를 추구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과 민족의 인간성 및 존엄성 회복과 정치·경제·사회의 민주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러한 통일개념에서의 主體는 남북한지역과 해외에 거주하는 7,000만 한민족 모두가 된다. 여기서 주체의 의미는 단순한 참여자에 그치지 않고, 통일이 가져 올 社會繁榮의 수혜자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실제 통일을 위한 과정은 남북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양정부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설정하고 있는 統一原則은 自主·平和·民主의 원칙이다. 자주적 원칙은 民族自決의 정

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으로 외세의 주도적 역할을 배제하며, 필요에 따라서 통일의 觸媒가 되는 외국의 역할을 이용하는 것은 자주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평화의 원칙은 무력행사를 배제하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통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통일의 當爲性이 결코 무력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한편 민주의 원칙은 통일의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성원 모두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 언급되는 「국민성원 모두」의 범위는 民族全體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 과정분석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妥當성과 實現方案에 역점을 두어 이의 추진에 필요한 先決條件을 두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선결조건의 제시가 통일을 위한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도가 배려된 것이며, 나아가 다양한 통일 논의의 수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능동적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보이는 統合節次 및 制度는 단계적·구체적이며 제도화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지며, 현단계의 남북대치 상황을 출발점으로 하는 첫 단계에서는 남북대화의 추진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민족공동체 현장을 채택하여 南北平和共存의 상태를 이룩하는데 역점을 둔다. 둘째 단계에서는 정치적

으로 「南北聯合」을 구성하고, 비정치적으로는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다. 이 단계에서 정례화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등을 설치·운영하여 통일국가 단계로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 기구들의 운영을 위한 시설은 비무장지대 내에 평화구역을 설정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셋째 단계에서는 총선거를 통해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시켜 統一을 완수한다. 선거의 준비는 남북평의회에서 마련될 統一憲法의 규정에 따른다. 이처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에 필요한 절차 및 제도의 구체적인 目標와 機能을 제시하고 있으며, 통일국가로 진행하기 위한 過渡段階로서 「남북연합」시기를 설정하고 있다.

다. 통일국가의 성격분석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밝히는 統一國家의 추구 목표는 福祉國家의 달성으로 자유, 인권, 행복이 통일국가가 추구할 最高의 善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족성원 전체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수립 및 유지가 목표가 되고 있으며 경제·사회체제로는 資本主義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피고용자들간의 타협과 협조가 이루어지는 後期産業資本主義 성향의 체제가 선택된다.

라. 종합평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이 韓民族 共榮의 手段으로서 필요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통일과정에서는 대화를 통한 합의와 共同體 형성을 위한 교류의 방법을 통하여 段階性과 分權的 정치체제인 聯合制를 과도 단계에서 설정하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통일국가의 성격을 설정하는데 있어 민족의 번영과 복지를 未來像으로 설정하여 남과 북의 경쟁에서 나타나는 이질화 현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교착된 통일논의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 것은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2. 在野統一案과의 比較分析

그러면 이러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위에서 분석한 재야통일안 사이에 어떠한 유사점과 상이점이 있는지, 또 서로간의 位相關係는 어떤지 살펴보자.

먼저 위의 재야통일안의 종합분석에서 보여지는 공통점을 기준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비교해 보면, 통일의 이념이나 통일의 과정에서 外形的 類似点으로 쉽게 발견되는 부분은 民族主義 理念과 南北韓 統合을 위한 평화적 접근방법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南北間 機能的 交流를 통해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대해 모든 재야통일안들도 民族主義를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민족주의를 앞세워 각 통일논의자들은 평화적 방법의 통일을 제안한다. 평화통일의 달성은 필연적으로 기능적 교류의 필요성을 불러옴으로, 결국 남북간의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 이념과 기능적 교류의 방법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재야의 통일논의는 일치하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통합방법의 내용에서도 유사성이 찾아진다. 段階的 統合節次의 선호가 그것이다. 즉 모두 地方分權體制를 통일의 과도단계 혹은 최종단계로 설정하여, 첫 단계에서는 평화공존 및 신뢰성 회복을 이루고, 다음으로 南北聯合의 단계를 거쳐 聯邦의 단계로 이행하도록 하는 단계적이고 지방분권적인 통합의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의 상존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가져다 줄 社會正義에 대한 기대가 각 통일안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야통일안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상당한 差異점을 갖는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재야의 통일논의들의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의 차이는 統一의 主體에서 찾을 수 있다. 재야의 통일안에서는 통일의 주체를 설정하는데 있어 통일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민중으로 제한하고 현남한 사회의 기득권층을 배제하고 있으나, 정부의 통일안은 해외동포, 북한주민, 그리고 남한주민 모두를 망라한 韓民族으로 넓게 설정하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재야통일안에서 보이는 두번

재 차이점은 統一의 概念으로부터 나온다. 통일의 개념은 재야의 경우 외세로부터의 식민지적 지배에서 한민족이 벗어나고 정권의 民主化를 통한 계급(혹은 계층)의 平等性을 이룬 후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결합하는 단순한 공간적 결합의 통일을 의미하나, 정부의 통일방안에서는 공간적·민족적 결합을 질적 수준까지 고려하여 달성시키는 상태를 의미한다.

세번째로는 統一原則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각 통일안이 갖는 세가지 원칙 중 두가지는 자주, 평화로서 공히 용어의 표현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에서 재야의 통일원칙은 非妥協性과 非論理性을 갖는다. 즉 자주원칙은 철저히 외세를 배격한다는 원칙이며, 평화원칙은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내에서의 폭력을 통한 변혁도 허용하는 통일의 당위성에 의해 무시된다. 반면 정부안은 외국과의 협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平和의 개념이 民族繁榮이라는 統一目標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開放性과 論理性에 입각한 원칙을 고수한다.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민주의 원칙은 후자가 민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 정치적 민주주의 개념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넷째로 보이는 양측안간의 차이점은 남북통합과정에서의 조직과 제도에 대한 각 통일안의 이해 태도이다. 재야통일논의에서는 남한내부에서 폭력을 통한 變革을 통일의 주요 手段으로 삼는 반면 남북통합과정에서 組織과 制度의 비중을 경시한다. 반면 정부안에서는 통합과정에 필요한 기구 및 제도에 관

하여 구체적 명칭 및 기능까지 규정하고 있어 機能論的 統合 論理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재야통일안간의 다섯번째 차이 점은 통일을 위한 先決課題 내용에서 찾아진다. 통일의 선결 과제로 재야통일안은 민주주도로 남한의 변혁 및 외세축출을 통한 자주성의 확보를 들고 있으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 정부가 양지역 주민의 대표가 된다는 조건 외에 어떠한 선결과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일을 달성하려는 能動性 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양측안의 여섯번째 차이는 統一國家의 性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일국가의 추구목표(최고선)는 재야통일론의 경우 현 남한사회의(계급, 계층, 혹은 민족에 관한) 모순해결을 통한 자유와 평등인 반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민주와 행복이 실현되는 이상적 미래상의 추구를 통일조국의 상태로 제시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체제에 있어서도 각 재야통일안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사회민주주의이거나 사회주의 성격의 민주민주주의인 반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自由民主主義體制와 産業資本主義體制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재야의 통일논의들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비교할 때 위에서 보여지는 兩側案의 相異性의 정도와 범위를 살펴 재야통일논의들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수렴될 수 있는지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統一主體에 관하여

재야의 통일논의는 현실의 사회모순을 바탕으로 民衆이라는 계층을 설정한다. 이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보이는 民族의 개념과 비교할 때 제한된 범위의 개념이 된다. 통일개념의 내용에서도 재야가 갖는 시각은 통일에 이르는 공간적 결합을 의미하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에 더하여 통일 이후의 未來像이 포함된 質的 概念을 담고 있다. 統一原則에서 보이는 차이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경우 民主의 개념이 갖는 포괄성과 자주 및 평화의 원칙에서 보이는 타협성과 논리성으로 재야통일안의 통일원칙을 우월하게 포용한다. 統合節次에 있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높은 수준의 제도화된 조직과 기구를 설정하고 있고 통일을 위한 先決課題에 대하여 신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낮은 수준의 제도화와 선결과제 제시로 현실성에서 한계를 보이는 재야통일안과 대비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안으로서 갖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포괄성·수용성 그리고 개방성이 강조되면 재야통일안을 수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다만 그 方案 實行者의 실천의지 및 능력이 관건이 된다 하겠다.

V. 結 論

本 研究에서는 재야통일논의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각 논의들이 갖는 共通點,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의 비교를 통한 유사점과 상이점 분석, 그리고 각 통일논의들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의 수렴 가능성 등을 고찰하였다. 재야의 통일안이 갖는 각각의 特徵들을 살펴볼 때 이 방안들의 절충 및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의 收斂이 어렵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갖는 包括性 및 開放性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條件을 해결함으로써 재야통일방안들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수렴 혹은 절충시켜 볼 수도 있다.

첫째로 재야통일안 논리의 기반이 되는 民族矛盾과 階級矛盾을 변혁의 방법이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야통일안의 주체가 되는 민중은 정치권력과 富의 불평등한 구조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지속적인 정치체제의 자주화·민주화 추진과 아울러 사회복지정책의 적극적 개발로 상대적인 소외계층을 체제내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보이는 정치의 民主化와 경제의(계급간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後期産業資本主義化가 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통일절차 및 제도의 차이는 남북간의 체제경쟁과 분단의 지속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남북간의 긴장완화

와 한국사회내에서의 統一論議 開放化가 이의 예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긴장완화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어 한국만의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나, 통일논의 개방화는 담당기관 주도의 公聽會 확대나 대중매체의 효율적 활용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조건의 충족이 장시간의 노력을 요하는 것일지라도 통일에 대한 國論收斂의 필요성과 통일이 갖는 民族史的 當爲를 고려하여 정부와 국민의 연대하에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 國土統一院. 「各黨 各界의 統一論議 關聯 資料集」. 1988.
- . 「政黨·團體·個別人士 統一論議」. 1989.
- . 「한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의 理論的 基礎와 政策方
向」. 1990.
- . 「民間次元의 統一運動과 南北交流」. 1988.
- 김광 의. 「학생운동논쟁사 2」. 서울: 일송정, 1991.
- 金洛中·盧重善 編. 「現段階 諸統一方案」. 서울: 한백사, 1989.
- 나라사랑 편집부 편. 「노동자와 통일」. 서울: 나라사랑, 1988.
- 문익환. 「가슴으로 만난 평양」. 서울: 삼민사, 1990.
- 민성일. 「통일교실」. 서울: 들베개, 1991.
- 민족과 국제관계학회 편. 「신세계질서와 민족통일」. 서울: 살
림터, 1991.
- 박현채·조희연 공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 서울: 죽산,
1991.
- .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 서울: 죽산, 1991.
- .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I」. 서울: 죽산, 1991.
- 백기완.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서울: 시
인사, 1989.
- 유성하. 「한미관계의 발자취」. 서울: 대동, 1991.
- 李相禹. 「統一韓國의 模索」. 서울: 博英社, 1987.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산하 평화적 조국통일촉진학생추진위원회 편.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서울: 남풍, 1988.
- 통일문제연구소 편. 「분단과 통일의 역사」. 서울: 민족통일, 1990.
- 한신대학 총학생회 학술부 편. 「통일국가론 입문」. 서울: 남풍, 1988.
- 함운경 외. 「현단계 통일운동론 I」. 서울: 친구, 1988.
- 허준혁. 「祖國統一 모델에 關한 研究」. 서울: 國土統一院, 1989.

2. 論 文

- 강형민. “이른바 「민중적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 「현실과 과학」, 제 7 호(1990. 10), pp. 153~173.
- 김민철. “한국사회변혁과 조국통일의 연관성을 재조명한다.” 「청년」, 제 1 호(1991. 8), pp. 22~57.
- 김수진. “통일(요구)강령의 구체화를 위하여.” 「현실과 과학」, 제 9 호(1990. 3), pp. 97~131.
- 김주환. “북한 통일정책의 지속성과 변화.” 「민족지평」(1990 겨울호), pp. 149~177.
- 김호진. “통일방안을 둘러싼 쟁점.” 「90년대 한국사회의 쟁점」. 서울: 한길사, 1990.
- 노홍식·김수진. “최근 통일논의에 대한 비판과 향후 우리운

- 동의 방향.” 「현실과 과학」, 제 7 호(1990. 10), pp. 109~138.
- 양재열. “조국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현시기의 전술적 과제.” 「청년」, 제 1 호(1991. 8), pp. 80~91.
- 이민수. “민중적 통일인가? 부르조아적 통일인가?” 「고대문화」, 제34호(1991. 6), pp. 76~91.
- 전원하. “국제정치 역학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동향과 전망」 (1990 가을호), pp. 20~38.
- 정대화. “민중적 통일방안의 모색.” 「동향과 전망」 (1990 가을호), pp. 85~116.
- . “민주변혁과 민중적 통일운동의 올바른 관계.” 「동향과 전망」 (1991 봄호), pp. 112~133.
- 정지영. “통일운동의 일대전환을 촉구한다.” 「길」, 창간호 (1991. 12), p. 177.
- 홍진표. “민주변혁과 조국통일.” 「동향과 전망」 (1991 봄호), pp. 112~133.